

● 2단계 BK21 사업에 2조 3백억 원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2012년까지 연간 2천 9백억 원씩 모두 2조 3백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단계 BK21(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계획을 1월 4일 공고했다.

◆ 지원 규모=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2단계 BK21 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모두 2조 3백억 원이 소요된다. 연간 최대 1개 사업단에 70억 원이 지원된다.

차세대 성장분야인 IT, NT, BT 등 응용과학 분야에 연간 1만 3천명,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 연간 3천 명 등 과학기술 분야에 연간 1만 6천 명이 지원 육성된다.

신설되는 경영, 의료 등 국제수준의 전문서비스 분야에 연간 1천명,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인문사회 분야에 연간 3천여 명이 지원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석사 월 50만 원, 박사 월 90만 원이 지급되고, 박사후과정생은 월 2백만 원, 계약교수는 월 1백 50만 원이 지급된다.

◆ 산학협력 활성화 유도 =2단계 BK21 사업은 1단계

사업이 사업단의 'SCI(국제 과학논문색인) 연구논문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중점을 뒀던 것과는 달리 대학원 수준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단 선정때 과학기술(응용) 분야 산업체 R&D 실적, 특허, 기술이전료 등 산학협력 평가비중이 1단계의 5% 미만에서 25%로 대폭 확대되고, SCI만이 아니라 산업체 연구비, 기술이전등도 SCI로 환산해 적용된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산업체 지원금을 연간 국고지원금의 10%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학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인력양성 관련 협약을 체결한 사업단은 평가 때 우대를 받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을 위한 사업에 모두 7백 25억 원이 지원된다.

또 의학전문대학원, 금융·물류·IT 경영 전문대학원 등 전문서비스인력 양성 사업도 신설된다.

의료 분야 8개, 경영 분야 4개 안팎의 사업단을 선정, 의

료 분야는 사업단별로 연간 25억 원, 경영 분야는 사업단별로 연간 15억 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의과대학의 경우, 전문서비스 인력양성 분야는 물론 과학기술 분야의 응용생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대학원 전환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MS사 등 해외 우수 기업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갖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캠퍼스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 성과 부진 시 중도탈락=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단 따놓고 본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과가 부진하면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탈락시키고 신규사업단을 진입시키는 등 경쟁 시스템이 도입된다.

2007, 2009, 2010년에 연차평가를 거쳐 분야별 최하위 사업단 사업비를 20% 내외에서 삭감하고 연구비 중앙관리제, 교원확보율 등 주요 협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한다.

중간평가는 2008년과 2011

년에 실시되며, 1차 평가에서 분야별 최하위 1~2개 사업단과 하위 30% 핵심사업팀은 재진입 신청 사업단과의 경쟁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사업단 선정과정에서도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단은 절대평가방식을 적용,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 신청조건 및 평가기준 = 분야별 사업 참여 교수 최소 기준 수가 1단계의 50% 수준으로 완화됐다.

교수들 사이의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사업단 참여 교수 수를 참여 대학원 학과 소속 교수의 70% 이상으로 하고, 교수와 학생은 하나의 사업단 또는 사업팀에만 참여할 수 있다.

대학의 경우, 매년 국고지원금의 최소 5% 이상의 대응자금을 확보해야 하고, 전문서비스(경영) 신청 사업단은 대학+산업체 대응자금을 국고지원금의 10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과학기술응용 분야의 경우, 산학협력 비중이 25%로 대폭 강화된다.

모든 분야의 평가에서 대학원생 취업률을 10% 안팎으로

반영하고, 연구실적의 양적 측면 외에 논문 인용도 등 질적 측면도 비중있게 평가된다.

지역 우수대학원육성 분야는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지역산업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기여도를 총점의 최대 20% 가량 평가한다.

● 누리사업 신규 사업단 5곳 선정

올해 누리사업 신규 사업단 대·중·소형 5곳에 1백 5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월 19일 올해 2천 5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누리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이 중 2004~2005년에 선정된 1백23개 사업단에 2천 3백 50억 원을, 신규사업단 5곳에 새로 확보된 1백 50억 원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단은 50억 원 이하의 대형 3곳, 30억 원 이하의 중형 1곳, 10억 원 이하 규모의 소형 1곳 등 총 5곳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은 오는 2009년까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조건은 교원 확보율 60%와 신입생 충원율 80%를 충족시켜야 하며, 2007년

부터 매년 전임교원 확보율을 갖추지 못하면 연차·중간평가에서 탈락하게 된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교원 확보율이 4% 포인트 높아졌으며, 평가지표에서 '국제화 노력(외국인학생 유치·지원, 교육과정 국제화, 국제교류 등)' 항목이 추가돼 대·중형의 경우 4%를 반영하기로 했다.

대형 및 중형 사업단은 11개 시·도의 추천을 받아 권역별로 각각 2개씩 추천을 하게 되는데, 울산은 경남에, 제주는 광주·전남 권역에 포함해 선정한다.

소형은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서 모든 사업단에 대해 상·중·하로 분류, 검토의견을 제출하면 중앙평가 시 지방의 의견을 30% 반영하기로 했다.

사업 신청은 중심대학을 기준으로 대학별로 3개 사업단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대형 사업의 경우, 반드시 시·도가 지정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돼야 한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관광컨벤션, 대구-메카트로닉스·생물, 경북-생물·한방, 광주-디자인·문화, 전남-물류, 대전-첨단부품·소재, 메카트로닉스, 울산-조선해

양·정밀화학·환경, 충북-이동통신·차세대전지, 충남-침단문화·농축산바이오, 강원-관광문화, 전북-생물, 경남-지능형 홈, 제주-건강뷰티·생물·관광·디지털콘텐츠 분야에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

신규 사업단 선정결과는 5월 중에 발표되며, 예산은 6월에 배정된다.

● **전문대 전공심화 이수하면 학사학위**

이르면 2007학년도부터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다시 전문대에서 1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월 18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정종택) 정기총회에 참석, 전문대학장들의 건의를 받은 자리에서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한 학사학위 부여는 적절한 교육의 질 관리만 보장되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빠르면 2007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전문

대 취득 학점을 포함해 1백 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전문대에서도 학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 졸업자가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직업교육과 연관된 전공교육을 받는 제도인데, 학위가 인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04년 32개 전문대가 1백 38개 과정에 4천 9백 93명의 산업체 근무 경력자를 재교육할 계획이었으나, 6백 85명만 등록하는 등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수자가 2천 1백 9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총회에서 윤여송 인덕대학 교수는 ‘전문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전문대 공업계 특성화 정책을 포기하고, 대학 구조 개혁 방안도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4년제 대학 정원의 특별전형 입학제도를 폐지하고, 1학기 수시모집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전문대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전문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학과별 수업연한을 결정해 이수학점에 따라 해당 직업중심 트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전공심화과정을 학사 학위과정으로 개편하고, △3년제 학과의 설립 폐지 권한을 학장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사학법, 대학-초·중·고 따로 적용**

앞으로 개최될 개정 사학법의 여야 간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대학과 초·중·고에 개정 사학법을 따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협상에 임할 전망이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월 2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선진사학 교육체제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사학법 적용에 있어 대학과 초·중·고는 구분해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국가발전이 이바지한 건진사학은 육성하고, 비리사학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학과 초·중·고는 학교의 운영방식을

비롯해 규모 및 학사행정 절차 등 차이가 있는 만큼 하나의 사학법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며 “이번 협상에서 이를 기본 바탕으로 재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초·중·고에 적용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대학에는 적용될 수 없는 부분도 대학과 초·중·고를 나눠서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사학법인의 이사장이 동일법인 내 초·중·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규정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이군현 의원(한나라당), 이승희 의원(민주당), 이명현 전 교육부장관, 강경근 숭실대 교수(법학)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개정 사학법 논란을 토대로 사학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기됐다.

특히 이승희 위원은 국·공립과 사학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이의 중간형태인 이른바 ‘제3섹터 학교법(가칭)’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섹터’란 정부로부터 일

정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제3섹터의 학교를 인정하게 되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며 “사립학교와 학생 및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단계적으로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줘서 비리사학을 외면하게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며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사학의 여건에 맞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방형이사제 폐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금지 조항 폐지, △임시이사 임기 유지 등의 개정방향을 밝혔다.

한편, 세미나를 지켜본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은 “개정된 사학법은 사학들을 지나치게 옹아매고 있어 자유로운 학교운영에 해가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사학법이 폐지돼야 선진사학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 특성화에 정부 자원 집중

각 부처별 대학지원사업의 사전협약이 제도화되는 등 대

학특성화에 정부 자원이 집중 지원된다. 또 특성화 지표를 개발해 향후 재정지원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R&D가 상용화되는 등 산학협력이 실질화되고,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도 연간 50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8일 특성화를 통한 대학구조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특성화를 통한 대학구조개혁 가속화=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서 대학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구조개혁이 대학 및 지역의 강점 분야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 한해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에 7백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선정된 대학에 5백억 원이 지원되었고, 올해 새로 선정되는 대학에는 2백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선정 결과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특성화 지표를 개발해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산학협력중심대학 등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맞는 평가지표를 올해 안에 개발, 시범 적용에 들어간다.

특성화 분야로 자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 '대학특성화지원위원회'를 구성, 정부 각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사전에 협의·조정하는 것을 제도해 나갈 방침이다.

◆ 학자금대출제도 확대 =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가 올해는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30만 명보다 20만 명 늘어난 연간 50만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소득확인을 전산화함으로써 대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용보증 평가모형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상환성 확보 방안 법제화 등을 통해 학자금대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 실질적 산학협력 강화 = 대학의 기술 창출과 기업체 이전 활성화를 통해 대학이 지역과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산학협력이 한층 더 강화된다.

먼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주주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나눠 갖는 '산학협력 기술주주회사(Technology Holding Company)제도'가 도입된다.

또 대학 기술의 산업체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커넥트 코리아' 사업을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권역별 거점대학 산학협력단을 선별, 오는 2010년까지 총 1백 10억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용역과 학술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부가가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기타 =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2조 3백억 원

이 투입되는 2단계 BK21 사업이 시작되어 올 4월에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수준의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경영전문대학원이 올 9월 문을 연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대학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전문대학원 체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Study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2만 2천 5백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아시아 및 BRICs 국가 등 발전 잠재력이 큰 국가의 차세대 지도자를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대입시 과학과목 가산점 검토"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는 2월 7일 이공계 하향 평준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대학 입학 시 과학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봤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공계 기피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 "이공계에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포

부를 갖고 있다”면서 개인 견해를 전제로 “과학 I 과 과학 II 가 있으면, 과학 II 를 보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줘 고교에서 수준높은 과학을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생각까지 해봤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황우석 서울대 교수 사태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최고과학자상과 관련, “최고과학자상을 만든 것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를 양성하고,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취지가 크다”며 “나올 수 있는 점은 보완하면서 취지를 살려 골격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 교수와 관련, “좀 아쉬웠던게 연구자이면서 관리도 하고 행정도 맡았다는 것”이라며 “황 교수에게 세미나나 출장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연구가 되겠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상에서 결과가 나려면 몇 년 걸릴텐데 몸도 조심해야 하지만 시간관리도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 해외유학생 유치, 정부가 적극 나선다

정부가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5만 명으로 확대하

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외 교두보 확보에 적극 나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13일 대학과 시·도 교육청, 기업을 묶어 3년간 개발도상국의 교육정보화를 지원하는 ‘3One’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1개 시·도 교육청과 1개 개발도상국을 묶어 지난해 처음 실시한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사업’을 더욱 확대한 것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15개국에 중고컴퓨터 3천 7백 55대를 지원하고 교원 등 3백 49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 해당 국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3One’ 정책은 이를 더욱 확대해 1개 교육청과 그 지역의 대학, 대상국의 특성에 맞는 산업체가 연계해 지역별 클러스터를 형성해 참여함으로써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도국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돼 국내 대학에 대한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한국유학 홍보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저변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이라크 평화재건을 위해 국방부가 설립하고 있는 22개교를 포함해 개발도상국 17개국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중고컴퓨터 4천여 대를 지원하고, 교원 약 3백 40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초청 정보화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여론전’ 박차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국회 제출을 계기로 사학법 재개정 문제의 이슈화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이다.

전국 시·도를 돌며 공청회를 여는가 하면 대규모 토론회와 지역구 의원 간담회, 여론조사도 계획하는 등 점점 식어가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되돌려놓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단 여당을 사학법 재개정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데는 성공했지만 원내 제2당으로서 사학법 재개정을 ‘단독처리’할 힘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즉, 국민을 상대로 우호적인 여론을 최대한 조성한 뒤

여야 협상에 임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2월 둘째주 사학법개정특위 소속 의원들이 영남 지역 사학을 직접 방문해 교사, 학부모 등과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2월 13일에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대토론회에서는 이사진이 해임된 사학에 투입되는 임시이사야의 파견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이관하고, 종교계 사학을 중심으로 자율형 학교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학법 재개정안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재개정안 초안의 주요 쟁점 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개정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학법개정특위 이주호 위원장은 2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이 사학 이사회를 규정하는 어려운 내용이어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면서 "그런 만큼 한두 마디 슬로건이 아니라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방식을 써야만 법 재개정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부, 여대생 취업지원 교양과목 개설 지원

여대생의 취업과 진로 지도를 위한 교양과목이 경북대, 동국대, 동의대, 서강대, 순천대, 연세대, 원광대, 충북대 등 8개 대학에 개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22일 여학생 특화 진로교육과정 개설 지원 대학에 이들 8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사업에는 34개 대학이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여대생들이 학점을 취득하면서 조기에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는 선정된 대학 가운데 우수사례를 발굴해 내년부터 전국 대학에 보급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진로지도가 취업과 관련해 일회성 행사에만 치중하기보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진로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신설했다"며 "40%에 이르는 여대생을 위한 별도 취업지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로스쿨 법안 졸속 처리 의도" 반발

국회 교육위원회가 2월 21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의하기로 한 데 대해 법학계와 시민단체가 "졸속 처리 의도 아니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이 모여 결성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성명을 내고 "로스쿨 법안 강행처리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여당은 특권사법의 주요한 축을 형성해온 변호사 배출구조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아니라 법조계의 이익과 소수 특정대학에 변조인 배출을 독점시키는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여당이 졸속으로 로스쿨법 제정을 시도한다면 우리 법학교수들과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사법개혁의 사망선고를 선언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을

위해 본격적인 실행행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또 “우리는 정부안이 지역 간·학교 간 차별을 심화시키고, 고비용으로 인해 빈곤층은 사실상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이비 로스쿨제도 도입안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고 밝히고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천 명의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정도의 로스쿨 총 정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지난 2월 15일 국회 교육위 공청회에서 대한변협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들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로스쿨의 원래 취지에 벗어난다고 비판했으며, 대부분의 의원들도 사법연수원을 학교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며 변호사 수를 대폭 배출하기 위해서 로스쿨의 총 정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국회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로스쿨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충분한 대안들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비대위 소속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를 향의 방문해 이 같은 뜻을 전달하였다.

● IT 접목학과 지원사업 10개 대학 선정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원장 김태현)은 대학의 IT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IT 접목학과 지원사업에 10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2월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 및 학과는 △남부대(방사선), △한국산업기술대(e-비즈니스), △호남대(경영), △상명대(생명정보공학), △목포대(전자상거래), △충북대(경영정보) 등이다.

또 △원광대(정보전자상거래), △한라대(컴퓨터응용설계), △한신대(e-비즈니스), △세종대(경영) 등 10개 대학이 있다. 이들 대학에는 1년간 1억 원에서 7천만 원까지 교육기자재 확충, 교과목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차등 지원된다.

● 울산국립대 혁신모델 도입

신설되는 울산국립대는 교수임용을 모두 계약제로 하고, 총장을 간선제로 뽑는 등 국립대의 혁신모델이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신설되는 울산국립대를 국립대의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

기 위해 학과 구성 및 특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월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국립대는 특수법인화 형태로 설립되고, 총장 직선제 대신 간선제를 도입한다.

또한 교수 임용을 모두 계약제로 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맞춤형, 주문식 학과로 산학협력 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울산국립대를 입학정원 약 1천 명 규모로 2009년 3월 문을 열어 작지만 특성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공계 중심 명문대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설립 부지는 ‘울산 지역 국립대학 설립추진위원회’가 울산광역시에서 추천한 4개 후보지 중 1곳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1천억 원 상당의 부지는 울산광역시에서 조성해 제공하고 2천 5백억 원 상당의 건축비는 정부가 부담하며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울산국립대 건설추진단을 발족, 대학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민자사업 추진을 전담하도록 했다. 